

NEWS & NEWS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철회하라” 치협·한의협·약사회 공동성명서 발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 요청한다.”

치협이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외국면허 인정 등 사실상 의료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강행 될 경우, ‘전 회원 반대 서명, 가두시위 전개 등 강력 대응 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해 놓은 가운데 지난 9월 14일 한의협, 약사회 등과 공동으로 반대성명서를 제출했다.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이날 반대성명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중 국제 의료 중심지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민 건강 및 국내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의료정책 시도가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한 만큼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외국 의료인에게 자국민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근거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 의·약인 면허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주권과 국민건강 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항변했다.

이들은 또 “외국 보건 의·약인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 제도의 취지·효력

을 무산시켜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의료인의 질 저하 및 전체 보건의료계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의료면허의 무제한적 개방·인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DDA 보건의료 협상의 기본전제인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남으로써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보건 의·약인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자국 보건 의·약인에 대한 정부의 역차별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외국병원의 유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기본적 의료보장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돼야 하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내외 의료기관 유치에 관한 영리법인허용·민간 의료보험도입·의료광고규제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은 현재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책을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도입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했다.

NEWS & NEWS

## “지도치의제 등 원-원 방안 모색” 치협·치기협, 지도치과의사제 TF팀 간담회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지도치과의사제도 등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과 치기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고 처음 갖는 지도치과의사제도 TF팀은 지난 9월 2일 시내 음식점에서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갖고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포함해 관련 현안 등에 대해 양 단체 실무팀을 중심으로 서로간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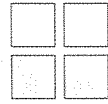
김동기 부회장은 “양단체가 서로의 권익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간다면 함께 윈-윈 할 수 있다”며 “서로의 권익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준관 치기협 부회장은 “현재 기공사 인력 감축을 비롯해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단축 등의 현안 해결에 치협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지도치과의사제도를 포함해 부정보철물 대책,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보존기간 단축 등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며, 또 빠른 시일내에 양 단체 회장단이 서로 만나 서로의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김동기 부회장을 비롯, 주동현 섭외이사, 마경화 자재이사, 손정열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치기협에서는 송준관 부회장, 최인규 섭외이사, 주희중 법제이사, 박재만 기공이사 등이 참석, 논의를 가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월 치기협과 공동으로 ▲치과기공소의 인성시 최소 면적 확보 ▲기공용 컴프레서, 기공용 스피들, 주조용 세트, 샌드기 등 장비 확충 ▲제작의뢰서 보관기간 2년으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건의’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수불사업 국제흐름·정보 교환 치협·구강보건학회 국제심포지엄 성황

치협이 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장기완)와 공동으로 지난 9월 9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관련, 첫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세계 수불사업의 흐름과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었다.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특히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항숙 의원 등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가운데 개최돼 더욱 관심을 끌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으로 '건강한 치아는 수돗물 불소로부터'라는 슬로건아래 미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베트남 등 전 세계적으로 수불사업에 탁월한 식견을 지닌 여섯명의 외국연자가 초청돼 수불사업 전반에 걸친 각국의 경험들이 자세히 소개됐다.

아일랜드의 데니스 오몰란 윌튼대학 교수는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 60년 수불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64년 수도 더블린을 시작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에서 수불사업이 의무화된 가운데 아일랜드 15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치수(DMFT)가 수불사업 실시 전인 60년대 8.2개에서 2002년 2.1개로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수불사업 실시후 우식정도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강보건을 위해 수불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수석연구원 윌리엄 베일리 박사는 "현재 미국의 경우 50개 상위 대도시중 43개 도시에서 수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45년 미시간주 그랜드래피드에서 수불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연간 수불사업에 1달러가 사용되면 38달러의 치료비용 감소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수돗물협회 수불분과위원장이며 수불사업 담당 엔지니어인 데이브 휴만씨는 "수불사업 반대론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250여 참고문

헌 가운데 52%는 상호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중 상당수는 수돗물 처리에 이용되지 않는 화합물과 관련된 것인 반면 수불사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이 확보되고 상호 검토된 논문이 360여개에 달한다"며 수불사업의 안전성을 피력했다.

이어 호주 뉴사우스웨일주 구강보건정책센터 산티 시바네스와렌 박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해 건강관련 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 부각시키는데 노력해 지난 97년 뉴사우스웨일 Health Service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치아우식위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재고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오타고치대 무레이 톰슨 교수는 "뉴질랜드 전 인구의 57%가 수불사업 혜택을 받고 있다"며 "수불 실시지역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치아우식경험율과 치아상실률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비교해 점차 수불지역 확대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호치민의학대학 치과대학 구엔 티 탄 하 교수는 호치민시의 수불사업에 대해 소개하면서 "호치민시는 수불사업을 치아우식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공중 구강보건사업으로 적극 고려하고 있다"면서 "실시 12년 동안 12세 아동의 우식유병률이 실시이전 84%에서 2003년 38.2%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안성모 협회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수불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세계 각국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향을 모색하고 수불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 수불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수불 반대 국민연대' 소속 회원 10여명도 참석해 '구강보건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기도 했다.

## 치과보철 보험법안 관련 치협 '태스크 포스팀' 구성

주성영 의원의 치과보철 보험법안 발의와 관련, 치협은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태스크 포스팀은 김재영 보험담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주·배성호 보험, 전민용 치무, 김철수 법제, 이원균 공보, 신호성 기획, 주동현 섭외이사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1일 첫 회의를 연 태스크 포스팀은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발의 의원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가진 후 대책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태스크 포스팀은 치과보철 보험법안 문제와 관련한 공식 입장 등 모든 사항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 국회 관계자와 의견조율은 물론, 법안진행 과정도 면밀히 관찰해 표명키로 결정하는 등 신중히 대처키로 했다.